

환경부·건교부간 인적교류 확대방안 보고

업무추진상 상호연관성이 높은 환경부와 건교부간에는 부처간 통합 등 장기 개선방안이 필요하지만, 조직통합에 앞서 단기에 추진할 수 있는 인적교류 확대방안을 보고 드림

< 요 지 >

1.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인사수석실, 사회정책수석실, 중앙인사위 및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(06.7~10월)
2. 금번 확대방안의 기본방향은 **핵심부서 교류(본부와 지방청), 관련 과장 및 실무인력까지 패키지로 교류**하는 한편 이번 교류자는 **부처통합시까지 장기 근무**하게 하는 것임
3. 동 확대방안을 공고·인선을 거쳐 **'06년 12월부터 교류**하여 근무하도록 추진

1. 그동안의 추진 경과

- 06.6.2 : “물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회의”시 지시
 - “물관리 문제를 포함한 개발과 보전 간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국토관리와 환경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것”
- 06.7.20 : “국토관리·환경관리 기능의 통합에 관한 회의”시 지시
 - “조직통합 전이라도 양 부처간 인적교류를 확대토록 할 것”
- 06.8.25 : 관련부처 실장급 회의(사회정책수석 주재)
 - 인사수석실 초안을 보고하고 각 부처 협조 요청
- 06.9.13 관련부처 과장급 회의 등(인사위 고위공무원지원단장 주재)
 - 건교·환경 양 부처가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
- 06.9.19 인사수석실 내부의견 검토·보고(인사수석)
 - 양 부처의 교류대상 국단위 기구를 확정
- 06.10.16 인사수석실과 사회정책수석실간 협의
 - 양 부처 교류 원칙 및 대상직위(안) 검토

2. 과거경험과 향후추진 기본방향

- 그간 환경부와 건교부 간에는 국장급 1개 직위를 상호교류
 - **환경부 상하수도국장** ⇔ **건교부 수자원국장** (04.1-06.1)

- 이는 기존정책을 보완·발전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
 - 국토종합계획과 같은 근본적이고 큰 이슈에 대한 융합보다는 우선 물관리에만 국한하여 시범적으로 교류하였고
 - 파견기간이 **2년으로 비교적 짧아** 상이한 조직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
 - 국장급 **1명** 교류로는 당해 부처에서 진정한 정책융합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점 대두

⇒ 따라서 앞으로 교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

- 국토균형발전본부와 자연보전국 등 **핵심부서**를 교류하고
- 관련 **과장 및 실무인력까지** 패키지로 교류하는 한편
- 이번 교류자는 **부처통합시까지 장기 근무**하게 하는 것이 필요

3. 부처간 합의된 교류대상 직위

□ 본부

- 국장급 : 자연보전국장 ⇔ 국토균형발전본부장
- 과장급 : 국토환경보전과장 ⇔ 지역발전정책팀장

□ 지방청

- 국장급 : 한강유역환경청장 ⇔ 서울지방국토청장
- 과장급 : 유역관리국장 ⇔ 하천국장
- ※ 각 과별 사무관도 함께 교류

4. 교류대상자 인선 방법

- 상대부처 장관에게 마음에 드는 국장을 고를 재량 부여
 - 환경부장관이 건교부 국장을, 건교부장관이 환경부국장을 인선
 - 인선된 국장이 과장 1명 및 사무관 1명을 인선하여 교류 (부처별 6명, 총 12명 교류)

5.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

- 우수인력들이 교류되어야 하나, 해당자들이 여러 이유로 회피할 가능성
- ⇒ 인사교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부처 통합 전단계 조치로 통합이 예상되는 부처의 직위에 미리 가서 근무한다는 점을 강조
- ⇒ 교류직위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공무원은 차기 인사에서 우대하여 희망보직을 부여하거나 승진시 발탁할 것임을 강조
- ※ 김석동(금감위 부위원장), 장태평(청렴위 사무처장) 등 최근 우수 교류자 발탁 사례를 강조

6. 향후 추진 일정

- '06년 10월말~11월에 공모 공고 및 인선
- '06년 12월부터 교류하여 근무

<참고 : 환경부와 건교부 본부 직제 중 교류가능 직위>

건 교 부		
국토균형 발전본부 (공모)	국토정책팀	-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- 도종합계획·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조정 - 국토정책위원회의 운영
	지역발전 정책팀	-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- 도종합계획의 승인·조정 - 광역권개발계획의 수립·조정
	산업입지팀	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 -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·운영 - 국가산업단지의 지정·개발
도시환경 기획관	도시정책팀	-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-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
	도시환경팀	-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·발전 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
수자원 기획관 (공모)	수자원 정책팀	-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연구·발전 -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계획의 수립 - 지하수 개발·관리에 관한 정책의 입안
	수자원 개발팀	-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- 댐건설계획의 수립·조정 -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계획의 수립·조정
환 경 부		
자연보전국	국토환경 정책과	-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-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중·장기계획수립
	국토환경 보전과	-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관리 - 국토종합계획·지역개발계획·수도권정비계획 및 도시 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- 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
	환경평가과	-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-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자연경관심의
수질보전국 (공모)	유역제도과	- 수변구역 지정·관리에 관한 사항 -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-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매수 및 관리
상하수도국	수도정책과	-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-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·관리
	생활하수과	-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·시행 - 지자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
환경정책실	정책총괄과	-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- 환경보전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·조정
	환경경제과	- 중요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 - 배출부과금·부담금 등 종합·조정